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5. 17.(수) 14:00 이후

「국가안전시스템 개편」 추진 100일, 일상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.

- 「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」 제6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
- 종합대책 65개 중점과제 중 37개 과제(전략1~2)에 대한 추진성과 점검
- 기관 간 협업 기반 재난 대비와 과학적 재난관리 분야에 큰 변화

□ 행정안전부는 오늘(17일) 「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」(이하 '종합대책')의 제6차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.

○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7일 발표된 종합대책 100일(5.6.)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종합대책 핵심과제의 주요성과와 추진실적을 점검하였다.

※ 제6차 회의(5.17.): 전략 1~2 해당과제(37개 과제 점검)
제7차 회의(5.31.): 전략 3~5개 해당과제(28개 과제 점검 예정)

□ 점검 결과, 가장 큰 변화는 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 대비·대응 태세 분야에서 나타났다.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관련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다양한 제도개선과 훈련이 진행되었다.

○ 우선 경찰-소방-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었다. 경찰-소방 간에 "긴급"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, 경찰-소방 상황실 간 상호연락관을 배치하여 원활한 소통·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.

- 또한 경찰이 인지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찰과 지자체 간 소통도 개선하였다.

○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, 소방청은 24시간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대응팀을 설치·운영(3월~)하고, 소방-보건소-응급의료기관(DMAT)-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시도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행중이다.

□ 종합대책에서 강조하는 과학기술과 데이터 기반 재난위험 예측과 대응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.

○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「신종재난위험요소 발굴센터」가 지난 3월 21일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이며, 6월 중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첫 위험요소 선정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.

○ 전국 지자체 CCTV의 지능형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부터 지자체, 연구기관,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, 법령개정안 마련 및 효과적 전환 계획을 검토중이다.

○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.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에 시행될 예정이며, 11월부터 72곳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거쳐 금년 내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시킬 계획이다.

○ 이 밖에도 주민의 위험신고에 대한 대응체계도 많이 달라졌다. 경찰에서는 「112반복신고감지시스템」을 도입하여 반복 신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였고, 외국인·장애인 등 전화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「긴급신고 바로앱」도 오늘(17일)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.

□ 지역의 재난안전역량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원체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이다.

○ 기초자치단체장 대상 재난안전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6월 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, 재난안전분야 근무 기피 문화 개선을 위한 수당, 승진 가점 등 처우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
○ 지역의 위험상황을 보다 신속히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재난문자방송 발송체계도 개선된다. 올 6월부터 극한호우시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바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*, 5월말부터는 재난문자를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도 보낼 수 있게되어 지역주민들은 마을단위의 위험 상황과 대피정보 등을 보다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.

* 금년 6월중 수도권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 전국 적용

○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지원과 시설복구에 더해 피해주민의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복구제도와 재난지역에 대한

국고보조 등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5월에 개정 완료하였으며,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개정 추진 중에 있다.

○ 한편,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 '10.29 참사 피해자 지원단'이 출범(3.4.)하여 피해자·유가족과의 소통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○ 경찰청은 지난 4월 시신과 유류품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가족 응대 방안 등을 일선에 안내하고 교육중이다.

□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이 안전대책의 현장작동성을 중시하는 만큼, 행안부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현장 안전점검과 대응도 많아졌다.

○ 종합대책이 처음 공개된 올해 1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110일 동안 차관(한창섭)은 총 11차례, 재난안전관리본부장(김성호)은 총 21차례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.

○ 장관 직무 대행 체제 속에서도,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는 행안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.

□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"종합대책이 강조하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기존의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정책개발과 점검을 양 날개와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추진해야 한다."라면서

○ "국민들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의 철저한 추진과 지난 4월 17일 시작되어 현재 절반 정도 진행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(4.17.~6.16.) 등을 통한 빈틈없는 현장점검과 재난예방도 추진해 나가겠다"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안전정책실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	책임자	과 장	박재연 (044-205-4540)
		담당자	사무관	임희성 (044-205-4538)

붙임 「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」 제6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계획

「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」 제6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계획

❖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발표 100일('23.5.6.)을 계기로 전략1~2에 대한 37개 세부과제 핵심성과 등을 점검코자 함

□ 회의개요

○ **(일 시) '23. 5. 17. (수) 14:00 ~ 15:20**

○ **(장 소) 세종청사중앙동 민원동 347호**(대회의실) ※ 복장: 평상복, 노타이

○ **(참 석) 재난안전관리본부장**(주재)**, 전략 1~2 소관 국장**

○ **(안 건) 전략1~2** 세부과제(37개) **핵심성과 및 추진실적 점검**

※ (서면점검) 종합대책 전략별(1~5) 2주간 추진실적·계획

□ 진행순서

※ 사회 :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장

시 간 (80')		내 용	비 고
14:00~14:05	5'	▪ **모두 발언**	**재난안전관리본부장**
14:05~14:45	40'	① **전략1~2 과제별 성과 및 추진실적 보고**	국·관별 국장 (2~3분 이내)
14:45~15:15	30'	② **자유토론**	전체
15:15~15:20	5'	▪ **마무리 발언**	**재난안전관리본부장**